

뒤집기나 수성이나…여야 후보 막판 총력전

재보선 D-2 새누리 2곳·무소속 1곳 “우세”

첫 ‘사전투표’ 총선부재자 투표보다 4배 높아

선관위, 투·개표 상황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4·24 재·보궐선거가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 3곳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안철수(서울 노원 병), 새누리당 김무성(부산 영도),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후보가 앞서 가고 있다는 게 여야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안보 이슈와 ‘낮은 투표율’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기 때문에 인물 대결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는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의 김무성 후보와 충남 이완구 후보의 인물론이 머물면서 과연 어느 정도 득표율로 승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 노원 병은 지지율에서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 투표함을 열어봐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허준영 후보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밀천이 있고, 조직력도 우위에 있어 현재의 지지율만으로 승부를 접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민주통합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서 자당 후보가 모두 열세인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등을 고려로 ‘정권 경종론’을 내걸고 마지막까지 유권자의 표심에 지지 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 영도에 출마한 민주당 김비오

후보는 새누리당의 독점으로 지역 발전이 더뎠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문재인 의원의 지원 유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여·청양의 민주당 황인석 후보는 ‘농촌을 살리는 생활정치’



4·24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9일 오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정태홍 통합진보당 후보(왼쪽부터),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서울 노원구 상계3.4동주민센터에서 마련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가운데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오른쪽)가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막판 바닥을 다지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층은 조직의 열세를 뒤집을 관건은 “높은 투표율 밖에 없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선거 당일까지 투표독려 캠페인을 벌여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몰고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9~20일 시행된 ‘사전 투표’에서 노원병(8.38%)이 영도(5.93%)와 부여·청양(5.62%)에 비해 활발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좋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의 김무성 후보와 충남 이완구

후보의 인물론이 머물면서 과연 어느 정도 득표율로 승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 노원 병은 지지율에서 다소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 투표함을 열어봐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허준영 후보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밀천이 있고, 조직력도 우위에 있어 현재의 지지율만으로 승부를 접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민주통합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서 자당 후보가 모두 열세인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등을 고려로 ‘정권 경종론’을 내걸고 마지막까지 유권자의 표심에 지지 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 영도에 출마한 민주당 김비오

선 당시 이들 3개 지역의 부재자 투표율 1.9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당시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2.1%, 부산 영도 1.5%, 충남 부여 2.2%였다.

안 후보측은 안 후보가 19일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투표 독려를 한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층은 승리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끝까지 완주, ‘의미있는 득표’를 얻는다는 목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4 재·보궐선거 당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3곳의 일부 투표소를 선정해 투·개표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3개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 개시, 진행상황, 투표 마감, 투표함 봉인 과정 등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24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19일 오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정태홍 통합진보당 후보(왼쪽부터),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서울 노원구 상계3.4동주민센터에서 마련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가운데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오른쪽)가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 협력도 설문’ 쉬쉬 논란

대선평가위, 4명 대상 조사 결과 공개 않해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대선 경선후보들과 김한길 의원의 대통령 선거운동 협력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대선평가보고서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선평가위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 민주당 지구당위원장과 당직자, 광역 의원 등을 상대로 대선폐쇄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했다.

하지만 설문 조항 가운데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상임고문과 김한길의

이에 친노(친노무현) 주류 층 일각에선 대선폐쇄가위가 지난 9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에게 대선폐쇄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비주류 인사들의 책임과 관련된 설문내용은 일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 의원 층은 21일 “김 의원을 흡집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당시 김 의원은 선대위에서 아무런 직할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137개 지역을 돌면서 지지유세를 벌였다”고 말했다.

대선폐쇄가위에서 활동했던 한 위원도 “보고서에 공개된 설문 내용은 일부로, 논란이 되는 설문조항은 평가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연봉 1억4586만원

세비 외에도 출장비 등 연 1억

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4586만 272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액수는 장관의 연간 보수액 1억5000만원보다 1000만원 가량 적지만, 차관의 연간보수액 1억3000만원보다는 1000만원 정도 많은 것이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이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 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

여기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증·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지급되며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씩이다.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 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이 지원된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되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당 임내현·전남도당 이윤석 의원

민주 시도당위원장 선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1일 각각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임내현(시진 일쪽) 의원과 이윤석 의원을 각각 시당과 도당위원장으로 추대, 선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단독 후보인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화순군 하니움문화포스터센터에서 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독후보인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내현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내외적인 어려운 시기에 시당을 맡았다”며 “광주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 정신을 지켜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시당은 당원과 시민 눈높이로 혁신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생활정치 광주시당이 되겠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총선 여성공천 30%’ 추진

호남·수도권 남성 ‘역차별’ 우려

최종 확정까지 논란일 듯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후보의 여성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당내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당현·당구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 공천자의 여성 비율을 지난해 4·11 총선보다 사실상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행 당헌에는 여성 공천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성으로 규정돼 있고, 세부규정인 당규에는 ‘15%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가 전체의 15% 가까이 공천됐다. 현행 당규에는 ‘최고위원회의의 결의로 예외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정확히 15%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과 여성 전략공천 비중 확대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대로 여성 공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과 여성 전략공천 비중 확대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태크” 소용량(10~30kw) 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비용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 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기금(cash 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 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질감 됩니다.

(주)셀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 1577-8905 019-624-2371

매 매

→ 대 475m², 건 1447m², 2004년 신축

→ 6층건물, 엘리베이터 2대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분할매매 가능

목포, 2호광장 사거리
구, 맹수 한의원 건물

임 대

→ 6층건물, 각층m²(110)

→ 6층 고급주택, 옥상 광고탑

→ 병/의원, 약국, 교회, 커피숍

체인점,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부동산경매

▶ 반토막 난 부동산! 지금이 찬스!